

한전공대 부지 선정 '배점 기준 유출'

한전 공과대학(일명 켈코텍·Kepco Tech) 최종 부지 선정 발표를 보며 남겨놓고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진 입지 선정 배점기준이 유출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한전공대 유치전에 뛰어들어 광주·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모 언론 보도로 한전공대 1·2단계 배점 평가 세부 기준안이 유출돼 본격적인 후보지 현장 실사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공대 부지 선정 배점 평가 기준은 한전으로부터 공대 설립과 관련된 제반 용역 업무를 수임 받아 추진 중인 전문 용역사 'A.T.Keamey(A.T커니)' 측이 구성한 '기준위원회'에서 만들었다.

분야별 배점 기준은 보안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한전 내 공대설립 추진단과 범정부설립지원위원회 청와대 관련 비서관실에도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로 관리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각서' 유명무실...공정성 훼손 우려 한전 측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단, 공대 입지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될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배점 기준안이 전달 됐다. 이후 광주시는 일선 4개 지자체(남구·서구·광안구·북구)와 전남도는 나주시 1곳과 만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자체에서 평가 배점 기준안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공대 입지 후보지 제안서를 접수 받기 전에 '보안각서'를 각각 제출 받았다.

보안각서에는 비밀 준수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같은 약속을 바탕으로 광주시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와 남구 도시첨단단지, 남구 승촌보 일원 등 3곳을 최종 후보지로 신청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도시 내 1곳과 인접지역 2곳 등 총 3곳을 후보지로 제안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지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전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천한 공대 입지 총 6곳 중 예비 후보지로 광주 1곳, 전남 1곳 등 총 2곳을 선정하고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 중 특정 지자체는 보안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2곳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본격화 되는 제안서 발표와 현장 평가를 앞두고 '배점 기준안'을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안각서' 규정을 철저히 지켜 온 지자체들은 강력

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배점 기준안 외부 유출은 분야별 점수 중 가장 높게 차지하는 '신학년 연계성' 부분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특정 지자체가 여론 물의를 위해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유출처를 확인하고,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공대설립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 사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용역사에 업무를 맡기고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 온 한전 측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전공대 설립단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용역사 내 기준위에서 작성한 평가 배점 기준안은 지자체에만 제공했는데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당혹스럽다"며 "마지막 평가 일정까지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정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공사장서 쏟아진 건설자재에 2명 추락사

광주의 한 신축공사장 폭대기에서 50대 2명이 쏟아진 건설자재 더미를 밟고 추락해 숨졌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8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 폭대기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 사이로 건설자재(파이프) 묶음이 떨어졌다.

해당 자재에 맞은 A(50)씨와 B(54)씨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A·B씨는 공사장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직원으로 동료 3명과 작업 도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14층 규모로 A·B씨는 나흘 전부터 15일까지 엘리베이터 설치 업무를 맡았다. 대형 크레인으로 자재를 폭대기층에 올리는 과정에 한 묶음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되면, 공사장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가석방 4개월만에 또 절도 3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가석방 4개월 만에 마트와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30일 사이 광주 광안구 한 마트에서 4만 원 상당의 식품을 훔치고, 돈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 차량에 들어가 훔친 예금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160만 원을 인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전 여친 동생에 흥기 휘두르고 감금 20대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헤어전 여자친구의 남동생에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4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그의 동생 B(18)군에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7시간 동안 B군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달 전 헤어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기사를 가정해 B군을 속여 집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흥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누나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하며 B군을 인근 술집 등지로 데리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 행사한 30대 검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출동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36분께 광주 광안구 비아동 한 아파트 앞에서 지구대 소속 B(43)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택시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이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기사는 A씨를 태우고 이동을 하던 중 길을 잘 못 들어 평소보다 많은 요금이 많이 나온 점을 인정하고 절감해주겠다고 했음에도 A씨가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용을 주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임형택 기자

아동학대 2만2천건 이상 발견율은 '2.6%'에 불과

한 해 아동학대가 2만2000건을 넘어서고 사망 아동은 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학대 발견율은 3%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등 피해아동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역량 결집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신고된 3만4169건 가운데 최종 학대 판정된 경우는 2만2367건에 달했다. 5년 전인 2012년 6403건이었던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4년 1만277건, 2015년 1만 1715건, 2016년 1만8700건 등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8명에서 38명으로 4.75배나 증가했다. 적발 이후에도 아동학대가 반복된 재학대도 2017년 처음 2000건대를 넘어선 2100건을 기록, 5년 사이 2.3배 늘었다.

그러나 아동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정건수(아동학대 발견율)는 2.64명으로 미국 9.4명, 호주 8명, 프랑스 3.94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 인구조동성 책관 아동권리과 소속이었던 아동학대대응팀을 아동학대대응과로 격상하고 인력도 5명에서 1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로 높이고 재학대 발생건수를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명에 훼손 관련 재판 출석과 부인 이순자 여사의 망언 철회 및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판결문 공개때 변호사 실명도 밝힌다 "전관예우 방지"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판결문에 변호사 및 법무법인 실명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

이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판결문에 적힌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을 실명화해 전관예우 우려를 막고 판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사 및 검사와 함께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 공개됐던 사건 관

계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 및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